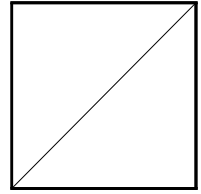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71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5. 12. (제 9 차)	

신한카드(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연월일	2021. 5. 12.

1. 의결주문

신한카드(주)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한카드(주)에 대해 실시한 종합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 위반과 관련하여 신한카드(주)에 대하여 시정명령 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시정명령안을 심사*하여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업무의 위탁) 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나. 관계법규 : <붙임 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33차 제재심의위원회(2020.12.18.) 심의필

<별지>

신한카드(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신한카드(주) : 시정명령

<시정명령 내용>

- ① 즉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수취를 중지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 ②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를 이행한다
- ③ 6개월 이내에 초과 수취 이자금액에 대한 환급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한다

2. 조치사유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의하면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14.4.2.~2016.3.2.) 연 34.9% → (2016.3.3.~2018.2.7.) 연 27.9% → (2018.2.8.~) 연 24%

- 신한카드(주)는 2015.8.18.~2019.11.28. 기간중 중도상환된 대출금 12억 30백만원(85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게 되어 927만원을 과다수취 하였음

<관련규정>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관 계 법 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생략)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①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생략)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7(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략)

□ 舊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6.3.3. 법률 제 14072호로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생략)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제11조의3(업무의 위탁)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7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0의3. 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 舊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2.8. 대통령령 제28420호로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7.9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7.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 舊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8.29. 대통령령 제28257호로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4.9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34.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카드(주)

2. 제재조치일 : 2021. 5. 1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2,880만원, 시정명령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의 1명
직원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 신한카드(주)는 2016.3.12.~2019.4.25. 기간중 계약기간의 만료, 탈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관련규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나. 시정명령사항

(1)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의하면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14.4.2.~2016.3.2.) 연 34.9% → (2016.3.3.~2018.2.7.) 연 27.9% → (2018.2.8.~) 연 24%

- 신한카드(주)는 2015.8.18.~2019.11.28. 기간중 중도상환된 대출금 12억 30백만원(85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게 되어 927만원을 과다수취 하였음

<관련규정>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가계금융과	여신금융검사국
연 락 처	02-2100-2513	02-3145-8803